

CH5. 국민정체성의 지정학

발제자께서는 본문의 요지를 한반도 국민의 정체성과 연관하여 유연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한반도는 하나의 민족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분단 이후 두 개의 국가라는 각자의 체제, 교육, 역사 기억을 통해 서로 다른 두 개의 국민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왔음을 지적한 것이 한국인 입장에서 크게 깨닫고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군사분계선의 군사적 역할과 평화의 역할이 공존하고, 젠더화된 안보 담론은 제가 8장에서 다뤘던 무질서한 지정학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발제자께서 제시한 토론 문제를 나름의 생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1.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남북한의 적대적 국가 정체성을 완화하는가, 아니면 각 국가의 영토적 정통성을 강화하는가?

A. '한민족'이라는 개념은 남북한의 적대적 국가 정체성을 완화하기보다, 각 체제의 영토적 정통성을 강화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스스로를 단일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규정합니다. 즉, 우리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라는 전제는 상대방의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한반도 전체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일 민족 담론이 통일의 당위성을 강화시키는 주장일 수 있지만, 경쟁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한반도를 하나의 역사적 · 문화적 공간으로 그린 지도는 분단을 극복하는 상상력을 제공하는가, 아니면 한반도 내부의 차이를 지우는가?

A.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역사적, 문화적 공간으로 그린 지도는 통일의 당위성과 분단 극복의 상상력을 시각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 내부의 차이를 지우는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그리는 지도가 분단을 극복하는 상상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한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 계급, 젠더,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등의 한민족이 아닌 '외국 출신 민족'들의 자리를 소외시킵니다. 따라서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Q3. 한국전쟁과 분단의 기억은 국가의 공식서사와 개인 · 가족의 기억 사이에서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가?

A. 한국전쟁과 분단의 기억은 위에서 아래로의 국가 중심의 지정학과 아래에서 위로의 국민 중심의 지정학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국가의 공식 서사에서는 전쟁을 조국 수호를 위한 숭고한 희생, 영웅주의 등의 적에 대한 승리라는 서사로 묶어냅니다. 이는 국가 중심의 안보 담론과 젠더화된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자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과 가족의 기억 측면에서는 민간인 학살, 피난, 가족의 해체, 월남과 월북, 고향 상실 등 파괴된 일상의 고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기억은 국가의 공식 영웅 서사로 온전히 환원되지 않으며, 때로는 국가 폭력의 실상을 폭로하며 공식 서사에 균열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Q4. 북한이탈주민은 동일한 민족의 구성원, 대한민국 국민, 이주민 또는 안보의 대상으로 각각 어떻게 재현되는가?

북한이탈주민은 상황과 담론에 따라 다르게 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께서 예시로 든 역할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재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개인적인 해석으로 예시에 나온 역할이 '남한에서 어떻게 드러나고있는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하는지'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1) 동일한 민족의 구성원: 분단을 극복하고 구출해야 할 동포이자, 보호해야할 대상이며, 통일의 이데올로기적 상징으로 호명됩니다.
- 2) 대한민국 국민: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영토이므로, 입국과 동시에 법적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정착 지원을 받습니다.
- 3) 이주민: 현실에서는 문화적 이질성과 편견으로 인해 차별받는 이주민이자 주변화된 타자로 취급받습니다.
- 4) 안보의 대상: 남북 갈등의 연장선에서 사상 검증을 거쳐야 하거나, 잠재적인 안보 위협 요인으로 의심받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Q5. 다문화사회에서 한국의 국민 정체성은 민족적 동질성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가?

A. 법적 국민, 문화적 민족, 거주 인구의 경계가 어긋나는 다문화사회에서 국민 정체성은 더 이상 한민족 혈통이나 과거의 신화(순수 민족 등)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국민 정체성은 어떤 역사와 핏줄을 공유하는가에서 어떤 일상의 공간과 제도를 공유하며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신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르더라도 민주주의 체제, 인권, 감수성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원적 시민 공동체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